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확정
민간인증기관 인증관리 강화

거시경제 동향

2013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자재 구입과 가격, 수리 등의 문제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5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확정

※ 본 자료는 2013년 6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고품질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배경 및 목적]** 낙농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급 불균형 및 낙농가-유업체간 원유(原乳)가격 갈등 해소, 소비자 기호 변화에 맞춘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과 함께 생산성 향상 및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확정
 - **(수급 불균형)** 젖소 생리상 소비 비수기인 동절기에는 생산량이 증가, 성수기 하절기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수급불균형 반복
 - **(원유가격 갈등)** 조정기준이 없어 3~5년 주기로 농가와 유업체간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
 - **(소비자요구 반영)** 고지방 기피, 단백질 선호, 위생수준 향상 등 소비자 요구변화 반영
 - **(낮은 자급률)** 유제품 총소비량 345만 톤(국내산 211)중 자급률은 61%에 불과
- 낙농산업 선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생산자, 유업체 등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지난 10여 년간 논의만 거듭하던 것을 정부의 끊임없는 조정 노력과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결과물
 - ※ '03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
- **[목표]** '12년 8,878kg → '20년까지 10%(9,786kg)이상 증가, 유제품 수출은 '12년 1억4천만 달러 → '20년 3억8천만 달러 획득

□ 주요내용

1)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와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시행

- **[목적]** 계절적 수급 불균형 감소, 집유 주체별* 생산쿼터를 관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연중 안정적 수급관리

※ 원유를 수집 이용하는 유업체, 협동조합을 말하며 전국에 22개
 ※※ 전국적 수급균형에도 집유 주체별 공급 과 부족이 상존하며, 집유주체별 생산량 관리로 농가 간 형평성 결여

- 장기적으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하여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 구축
- 성수기 생산 확대를 위한 농가지원 강화, 비수기 잉여원유의 가공원료유 활용을 확대하도록 지원

2)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

- 3~5년 주기로 원유가격 결정시 마다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 반복되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유생산비와 연계한 원유가격 연동제를 '13.8월 부터 시행

3)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

- 장기간 미해결 과제였던, 원유의 성분·위생수준 가격체계도 소비자 기호 변화 충족을 위해 현재 유지방 함량중심에서 '14.1월부터 유단백질 기준 새로이 신설
 ※ (현행) 유지방, 체세포수, 세균수 → (개선) 유단백질 추가

4) 생산성 향상과 소비기반 확대

- 신규후계농가를 대상으로 집유 주체별 납유권 임대제도 도입하여 농가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춤으로서 진입 장벽 완화 및 규모화 확대 지원
 ※ 신규·후계농가 납유권 임대: 최대 1톤/농가(3년 거치 7년 회수)
-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육성우 사육비율을 낮춤으로써 원유 품질향상, 동물복지증진, 생산비 절감 등 도모
- 수출확대를 위해 유제품 공동 마케팅 추진, 청소년기 우유 음용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확대
 ※ '13년도 공동 마케팅 예산: 7억 원(낙농자조금)
 ※ 차상위계층 무상 지원: (현재) 초등 → (계획) 중·고등까지 확대

주요 농정 이슈_2

민간인증기관 인증관리 강화

※ 본 자료는 2013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민간인증기관 삼진 아웃제 도입 등 인증관리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민간인증기관 「삼진 아웃제」 도입 등 인증기관 관리 강화

- [실태] 행정 처분된 인증기관들이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되어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 불가능
- [개정] 3년 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 가능
 - 인증기관 재지정시에도 부실 인증심사 내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부적격 인증기관의 재지정 차단

□ 단체인증에 대한 심사 절차, 행정처분 등 강화

- [실태] 전체 인증의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 주로 발생**
- [개정]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생산단체에서부터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인증품 발생 최소화**
 - (단체구성) (현행) 2명 이상의 생산자 → (개정) 5명 이상
 - (단체인증기준) “신설·개정” 단체인증을 신청하려면 생산관리자를 지정 하여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및 교육하고 예비심사 등을 거쳐 야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구비요건 신설
 - (행정처분) (현행) 개별농가 처분 → (개정) 단체구성원 비율에 따른 차별적 처분
 ※ 구성원이 15호 이하인 경우(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5호 이하), 16호 이상~ 99호 이하인 경우(10호 이하), 100호 이상(15호 이하)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도입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시행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도입

- (정의)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
- (인증대상) 사료

○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시행

- (비인증 재포장업체의 문제점)
 - i) 원료 및 출하품의 입·출고 내역 등을 기록 관리하지 않아 인증품에 대한 이력관리가 어려움.
 - ii) 인증품 취급과정에서 비인증품과의 구분관리가 안되어 비인증품의 혼입 우려
 - iii) 인증품 취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용수, 시설 및 품질관리 위반 개연성이 높음.
 - (시행내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산물 등의 표시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 선정
-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은 공시를 거친 후(3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거시경제 동향

2013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6월 12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3년 5월 수출물가지수

○ [수출물가] 전월대비 1.0% 하락

※ 전년 동월대비 5.9%↓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7% 하락(전년 동월대비 10.8%↓)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	-
	하락	냉동참치 -3.5, 냉동어류 -1.8, 신선어패류 -0.6	냉동참치 -34.5, 냉동어류 -12.6, 신선어패류 -9.1

- (공산품) 통신·영상·음향기기가 올랐으나 제1차금속제품 및 화학제품 등이 내리면서 전월대비 0.9% 하락(전년 동월대비 5.8%↓)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월	3월	4월	5월 ²⁾	2월	3월	4월	5월 ²⁾
총 지 수 ¹⁾	1000.0	2.4 <0.6>	0.3 <-0.9>	0.6 <-1.1>	-1.0 <0.1>	-5.6 <-2.0>	-5.9 <-3.4>	-5.7 <-4.0>	-5.9 <-1.6>
농 립 수 산 품	4.3	-1.6 <-2.2>	2.4 <1.5>	0.9 <0.0>	-1.7 <0.3>	-16.1 <-8.7>	-9.5 <-3.5>	-7.2 <-0.9>	-10.8 <0.6>
공 산 품	995.7	2.4 <0.6>	0.3 <-0.9>	0.6 <-1.1>	-0.9 <0.1>	-5.5 <-1.9>	-5.9 <-3.4>	-5.7 <-4.0>	-5.8 <-1.6>
섬유 가죽제품	41.9	1.9	1.3	1.6	-1.0	-5.9	-2.9	-2.1	-4.7
석탄 석유제품	123.9	5.9	-4.5	-3.2	-1.3	-6.3	-13.0	-14.8	-10.7
화학제품	173.8	2.3	-0.8	-0.1	-1.5	-4.8	-6.7	-7.1	-6.9
제1차금속제품	95.7	1.9	0.5	-1.2	-2.7	-9.1	-8.8	-10.1	-12.9
일반기계제품	90.8	1.9	1.2	1.7	-1.3	-2.7	-1.5	-0.8	-3.3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125.8	1.3	4.3	5.2	-0.5	-4.2	-0.1	3.6	4.8
통신 영상 음향기기	59.6	1.8	-0.7	-2.0	4.9	-13.0	-13.6	-14.5	-10.4
수송장비제품	111.3	2.1	0.9	1.6	-1.0	-0.2	0.2	0.0	-2.3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2013년 5월 수입물가지수

○ [수입물가] 유가 및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8% 하락**

※ 전년 동월대비 9.6%↓

- (원자재) 옥수수, 커피 등 농림수산물과 원유, 아연광석 등 광산품이 내리면서 **전월대비 1.8% 하락**(전년 동월대비 10.5%↓)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2% 하락**(전년 동월대비 5.7%↓)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의 등락>

단위: %

구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상승	-	-
하락	천연고무 -13.0, 옥수수 -2.5, 옥수수 -2.5, 밀 -1.6, 커피 -2.4, 원목 -1.0, 돼지고기 -1.8, 우유 -1.0, 원면 -0.7, 쇠고기 -0.5	천연고무 -34.4, 커피 -10.9, 원면 -1.6, 돼지고기 -11.4, 냉동어류 -12.4, 옥수수 -6.2

- (중간재) 비철금속과 1차제품, 일반기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9% 하락(전년동월대비 9.9%↓)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월	2월	3월	4월 ²⁾	1월	2월	3월	4월 ²⁾
총 지수 ¹⁾	1000.0	2.7<1.0>	-0.8<-1.9>	0.1<-1.4>	-1.8<-0.6>	-8.6<-4.6>	-10.8<-8.0>	-9.7<-7.5>	-9.6<-4.8>
원 자 재	346.4	4.1<2.0>	-2.0<-3.3>	0.2<-1.6>	-1.8<-0.8>	-9.9<-6.8>	-14.3<-12.4>	-12.1<-11.0>	-10.5<-6.9>
농림수산물	21.6	2.3	1.0	-1.2	-1.2	-2.9	-3.4	-5.7	-5.7
광 산 품	310.3	4.1	-2.1	0.3	-1.7	-10.4	-15.2	-12.6	-10.8
중 간 재	467.1	2.4<0.7>	-0.5<-1.6>	-0.4<-1.9>	-1.9<-0.7>	-8.3<-4.0>	-9.4<-6.4>	-9.3<-6.9>	-9.9<-4.7>
자 본 재	94.7	1.0<0.0>	0.4<0.0>	1.0<-0.1>	-1.7<0.0>	-6.8<-0.2>	-6.4<-0.8>	-6.2<-0.8>	-9.0<-0.6>
소 비 재	91.8	1.2<-0.1>	0.9<0.3>	1.3<0.0>	-1.4<-0.4>	-3.2<0.3>	-4.1<-1.4>	-2.7<-0.6>	-3.9<-0.3>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자재 구입과 가격, 수리 등의 문제

※ 리포트 전문은 KREI사랑방사이트 리포터창/리포터 활용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영농철 농자재 관련 여론 및 기타 연장 여론

1)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3. 5. 31 ~ 6. 5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접수건수: 30건

2) 주요내용

<영농철 농자재 관련 여론>

-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 가격 제각각
- 농협은 주요 자재 외에는 취급하지 않는 품목 많아
- 농협중앙회의 독점계약으로 농자재 가격은 시중보다 비싸
- 농자재 원가 및 인상 요인 분석으로 합당한 가격결정 해야
-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실시해 효율성 제고
- 임대 농기계는 보험가입 의무화 시켜야
- 농자재에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비교구입 가능하게 해야
- 농자재 가격은 고공행진, 친환경 농자재 가격 너무 비싸
- 대농기구는 농기계 전문 수리센터를 운영해 저비용 수리 가능하게 해야
- 농자재 구입비와 수리비는 영농비에서 큰 부분 차지

<기타 농촌현장 여론>

- 농업인 교육 효율성 재평가 요구
- 밭브랜드육성사업에 전문적인 실무 컨설팅 요구
- 농산물 생산통계 보급으로 수급조절
- 마을공동 급식 확대시켜야
- 농가지원 유류종류 통일해 공급해야

□ 영농철 농자재 관련 여론

○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 가격 제각각

- 농자재는 거의 80%를 농협에서 구입하고 있음. 각종 펠름, 농약, 비료, 고추지지대, PP포대 등을 구매하는데 일반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것도 다수 있고 각 농협마다 가격이 다르기도 함.<전남 화순, 나중주>
- 농자재는 주로 농협에서 구입하고 있는 편이며, 가격은 시중이나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마다 가격 차이가 있음.<전남 순천, 김종근>

○ 농협은 주요 자재 외에는 취급하지 않는 품목 많아

- 지역농협에 가면 농자재가 거의 다 있다고 하나 돈이 안 되는 자재는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음.<제주 서귀포, 김상우>
- 화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토와 화분은 농협 자재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수입업체를 통해 구입해 가격의 상승폭이 매우 큰 편 <강원 철원, 이윤희>

○ 농협중앙회의 독점계약으로 농자재 가격은 시중보다 비싸

-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되어 있는 몇몇 회사 농자재 제품을 단위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음. 정부유자나 보조 사업으로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계속해서 농협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음.<강원 홍천, 변해동>
- 농민들은 대부분 농협을 통해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중앙회가 일괄 계약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은 시중보다 비싼 편임. 지역농협에서 계약하도록 하여 지역농협들끼리도 경쟁시켜 가격을 낮추도록 하면 좋겠음.<전남 나주, 노웅곤>
- 농자재 구매량이 많으면 매입단가가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데 전국 수요량을 거머쥔 농협중앙회의 협상 단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함.<경북 상주, 김인남>
- 농산물의 가격은 세월이 지나도 큰 변동이 없는데 농협에서 농자재 구입 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의문, 일반 농자재상보다도 더 비싸고 가격차이가 큰 편<전남 함평, 권명주>

○ 농자재 원가 및 인상 요인 분석으로 합당한 가격결정 해야

- 퇴비, 비료, 농약 값이 매년 인상되는데 정부에서 원가분석을 통해 폭리나 부당하게 높은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지도·감독 필요<경기 안성, 임충빈>
- 농기계 값의 인상요인은 자재나 생산비의 상승요인보다는 분기별 기계 가격 인상결정을 신고만 하면 그 가격을 인정해주는 정부행정 방침이 더 문제<경북 군위, 윤석구>
- 비료, 농약, 농기구 값이 매우 비싸며, 농자재의 원가는 얼마인지, 원가 대비 몇%의 이윤을 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 되지만 함.<강원 영월, 유영조>

○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실시해 효율성 제고

- 농협에서 기계를 구입해 마을별로 임대해 사용하면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계의 사용일수 증가로 효율성도 향상되며, 유류절약, 작업능률도 더 높일 수 있으니 이점이 많을 것임.<경기 안성, 임충빈>
- 농기계은행을 운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절실함.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되 농기계구입과 유지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임대비용을 최소화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야 함.<충남 공주, 이봉룡>
- 농자재, 특히 농기계는 연중 사용일수는 적는데 계속 대형화되어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됨.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기계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농기계 확대 필요<경북 영주, 김기원>

○ 임대 농기계는 보험가입 의무화 시켜야

- 농작업 중 임대한 농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 고장정도가 심하면 수리비가 수십만 원 이상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임대농민과 분쟁 발생<충북 증평, 김주식>

○ 농자재에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비교구입 가능하게 해야

- 농자재는 자율가격제로 제품마다 가격이 붙어져 있지 않아 소비자인 농업인은 불편함. 가격표시를 해 두면 일일이 묻지 않고도 비교·구입이 가능해지고 판매자 마음대로 가격을 부를 수 없게 될 것임.<경기 안성, 임충빈>

- 요즘은 어떤 물건을 사도 정가표시가 있는데 유독 농자재의 경우(비료, 농약 등) 정가표시가 없고 같은 제품이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다른 문제가 있음.<강원 정선, 남진하>

- 가까운 농자재 판매상을 비교·구입하는데 종종 부르는 게 값인 곳도 있음. 식당의 원산지 표시 의무처럼 농자재 판매상에도 단가 표기의무를 시행해야 함.<경기 용인, 김경태>

○ 농자재 가격은 고공행진, 친환경 농자재 가격 너무 비싸

-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부담이 큰데, 농자재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떨어지지 않음. 특히 친환경 농업 시대가 부각되면서 친환경 농약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임.<경기 남양주, 김용덕>

- 농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농산물 가격은 언제나 제자리거나 하락하는 실정이라 안타까움.<전남 보성, 이동교>

○ 대농기구는 농기계 전문수리센터를 운영해 저비용 수리 가능하게 해야

- 농협이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해 경운기나 관리기 등 소농기구를 수리하고 있지만 트랙터나 콤팩트 등 대농기구는 개인 수리센터에서 수리하고 비용이 많이 지출됨.<경북 군위, 윤석구>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작은 농기계의 수리를 해결하고 있지만 고가의 큰 농기계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수리센터에서 큰 비용을 주고 수리함.<전남 함평, 권명주>

- 경운기 이하 소형농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반면, 대형농기구는 민간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수리하는데 수리센터 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고 비싼 편임.<강원 영월, 유영조>

○ 농자재 구입비와 수리비는 영농비에서 큰 부분 차지

- 농자재 구입비는 영농비의 절반가까이 되며 수리비 또한 만만치 않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영농기계 구입비, 고가의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함.<경남 김해, 김병철>

- 영농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자재 값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영농비 절감으로 농업소득이 향상되어 영농의욕 고취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경기 안성, 임충빈>

□ 기타 농촌연장 여론

○ 농업인 교육 효율성 재평가 필요

- 하루가 멀다 하고 비즈니스 교육, 강소농 교육, 품목조합에서 하는 교육 등 교육이 지나치게 많아 한참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사일에 집중할 수 없고 벅차다는 생각이 듦.<충북 괴산, 박종임>

- 유사한 농어민 교육이 너무 많고, 회원은 어딜 가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이어서 혼란스러우며, 비용이 낭비된다고 생각됨.<강원 영월, 유영조>

- 농번기에는 심야에 강소농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농업경영관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수준이 높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강원 춘천, 변옥철>

○ 발브랜드육성사업에 전문적인 실무 컨설팅 필요

- 발브랜드육성사업 수행 시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으나 현업실무가 부족해 사업장 장비선정 및 설치가 어려움. 표준설비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등 전문적인 실무컨설팅이 필요<강원 영월, 유영조>

○ 농산물 생산통계 보급으로 수급조절

- 해마다 마늘, 양파, 배추, 무 등 농산물가격이 민감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음. 농업통계가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어려워 악순환이 지속됨.<경기 안성, 임충빈>

○ 마을공동 급식 확대시켜야

- 농촌에서는 일꾼들에게 식사를 차려주는 가정집이 많은데, 따로 영업장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업현장 식당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음.<충북 단양, 정화려>

- 여성 농업인의 농업 종사가 늘고 있어 농번기철에는 마을 공동급식이 운영되고 있음. 호응이 매우 좋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음.<전남 나주, 노옥곤>

○ 농가지원 유류종류 통일해 공급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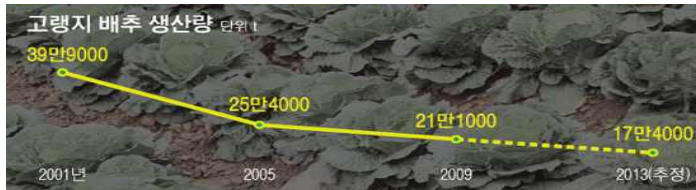
- 하우스 온풍난방기의 사용유종은 경유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는 등유를 공급하고 있음. 유종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유열량이 경유보다 낮아 유가부담만 가중되는 실정임.<전남 나주, 노옥곤>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6월 10일~14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고랭지 배추 생산량 10년 만에 반토막



- **고랭지 배추,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생산량 감소**, 올해도 지난해 보다 재배면적·생산량 모두 감소할 것이란 전망. ▲통계…(농경연) 올해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생산량** 각각 5,226ha, 17만4,448t 추정, 이는 **전년대비** 재배면적(5,495ha)·생산량(17만7,708t)보다 각각 **4.9%, 1.8% 감소**, (통계청) **고랭지 배추 생산량** ('01년) 39만9,000여t → ('05년) 225만4,000여t → ('09년) 21만1,000여t → ('13년) 17만4,000여t로 불과 **10여년 만에 반토막**. ▲원인과 여파…온난화에 따른 산간지역의 재배 환경 변화, 연작장해, 감자·무 등으로의 작목전환 등이지만 한편, 서울 가락시장 등 유통현장에선 이 같은 원인보다 **정부의 배추가격 억제 정책**이 초래한 **농가들의 생산기피**로 국내 자급 기반이 급속히 위축. ▲대책마련 시급…수입배추 들어오는 **정부 개입 자제, 생산기반 안정화 대책 마련** 서둘러야

자료 : 농민신문(2013.6.10)

□ 칠레산 과일 안국서 최대 성장

- **칠레산 과일**의 아시아 수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최대 성장세**…**포도·사과 수출 급증**이 원인. ▲칠레과일수출협회(Asoex), (**칠레산 과일의 아시아 수출량**) '11~'12년 시즌('11.9월~'12.8월) 38만 718t, '10~'11년 시즌 34만4,006t에 비해 **10.7% ↑**. '11~'12년 시즌 (**수출 물량**) 6만2,758t으로 '10~'11년 시즌에 비해 **30.3% ↑**. (**중국 수출량**) 16만

8,589t으로 **22.8% ↑**. ▲aT, (**칠레 포도 수입량**) '12년 5만3,884t(수입액 1억 3,814만 달러)으로 '11년 4만7471t(1억2,000만 달러)에 비해 **13.5% ↑**. 특히 **수입물량 (사과)** 2,356t(522만7,000달러)으로 '11년 1,623t(294만3,000달러)에 비해 무려 **45.2% ↑**. 반면 (**오렌지**) '11년 3,760t(539만 달러) → '12년 3,136t(423만 달러), (**토마토**) 1,299t(135만 달러) → 12,72t(134만 달러) 등으로 **16.6%, 2.1% 각각 감소**

자료 : 농민신문(2013.6.12)

□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보상… 안우농가 '슬렁'

- 농식품부·전남도, 6.10일,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및 폐업보상 대상품목으로 선정**. **한우농가 보상금 규모 기대 못 미치지만 '차라리 폐업이 나을까' 뒤숭숭**. 현재 정부, 폐업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조수입에서 경영비와 자가노력비, 토지 등을 뺀 순수익의 3년치 지원**. 순수익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보상금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70~80만 원 선 전망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6.14)

□ 임가소득 4년 연속 성장세

- 산림청, **임가소득 4년 연속 지속적인 성장세**. '12년 ▲**임가 소득**… 2,960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0% ↑**. 이는 임업소득이 5.4%(43만2,000원), 임업 외 소득이 7.0%(86만8,000원) 증가한 것에 기인, ▲**임가의 임업 의존도**…**28.7%**로 전년대비 **0.4% ↑**, ▲**임가의 지출**…연간 2,546만 원으로 전년대비 **0.7%(17만 6000원) ↓**, 이 중 비소비 지출이 50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2%(16만7,000원) 감소한 반면, 소비지출은 전년과 비슷, ▲**임목자산을 제외한 임가의 자산**…3억 9,18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4.5%(1,687만8,000원) ↑**, 고정자산·유동자산 각각 **4.8%(1,543만 원) ↑**, **2.7%(144만8,000원) ↑**, ▲**임가의 부채**…전년대비 **3.5%(115만4,000원) 감소**한 3,160만8,000원으로 이는 임가소득 증가로 인해 임업용 부채를 일부 상환함으로써 임업용 부채가 14.3%(159만6,000원) 감소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6.13)

□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그림의 떡’

- 복잡한 절차와 현실과 맞지 않는 구비 서류 조건* 때문에 많은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지원 신청 포기. (농가입장) 사료를 구매할 때마다 서류 준비, 그 과정에서 유류비 등 비용 계산하면 차라리 비용이 들더라도 외상으로 쓰는 것이 싸다고 판단해 구매자금 신청 포기, 정부가 생색만 내고 실제로 자금을 농업인에게 주지 않겠다는 의도. 또한 사료 구매와 기존의 외상매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자금을 쓰려는 대부분 축산농가들은 담보대출과 농신보를 이용한 신용대출 한도까지 근접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의 외상매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 기존 외상매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 자금을 받으려면 축산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농신보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농신보는 이를 위한 보증은 불가. 대출에 대해 이중으로 보증을 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대출, 대출금 한도 내에서 농가들이 분할해 사료를 구입 가능하도록, 외상매출금 상환을 위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자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

※ 사료구입에 따른 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사료구매 할 때마다 제출해 자금 대출형식을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6.10)

□ 축산물 도축일 표시 의무와 ‘걱정되네’

- 노웅래 의원,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 축산물 표시기준에 도축일 표시, 도축부터 제조·가공·포장까지 기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유통기한 내 제품이라도 소비자들 구매 꺼릴 수 있어 ‘소비 위축 우려*’. (육류유통수출입협회 입장) 육가공업체의 경우 일정 정도 재고 물량이 있어야 원활한 유통이 가능한데, 도축일 표시할 경우 유통 흐름 깨지고 수급 문제 발생, 축산가공물의 경우 도축일이 각기 다른 식육 원료를 한꺼번에 제조·생산하는 구조로 인해 생산제품에 도축을 별도 구분표시는 사실상 불가능. 국내 축산물에만 도축일 표시할 경우 수입 축산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 따라서 축산물 도축일 표시는 오히려

소비 위축시켜 국내 축산업에 악영향, 유통기한 표시제도와 축산물이력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관리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

※ 실제 꼬리나 사골 등 부산물의 경우 계절적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부분 냉동제품으로 유통이 이뤄지는데, 도축일을 표시할 경우 가뜩이나 제고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물 소비가 더욱 위축

자료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3.6.10)

□ 농업인 생산 단순가공 농산물 식품위생 예외적용...기준완화

- 신성범 의원, 6.5일,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한해 가공해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민이 농산물을 단순 변형해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이로 인해 삶은 고사리,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판매한 농민들 중 식파라치 표적이 되어 벌금을 무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 앞으로 예외규정 두어 완화된 기준 적용해 농업인이 단순 가공한 농산물을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게 돼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자료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정신문(2013.6.10) / 농민신문·원예산업신문(2013.6.12)

□ 국산 밀·콩 내년부터 공공비축

- 농식품부, 안정적인 식량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주요 양곡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9월부터 발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산 밀·콩에 대한 비축 시행될 전망. 내년도 공공비축량을 국산 밀은 1만t, 콩은 5,000t, 기획재정부와 예산반영을 위한 협의 진행 중.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 비축량이 결정되면 이를 시작으로 국내외 수급상황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비축량을 늘려 국내 소비량의 17%(2개월치 분량)까지 확보한다는 방침. 국산 밀·콩의 공공비축에 따라 앞으로 국내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향 안정되고 생산 기반도 확충되는 등 국내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 지난해 축산물 수출검역신청은 1만4,312건으로, 검역수수료가 면제되면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축산물 수출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자료 : 농민신문(2013.6.14)

□ 농업, 농기계 대영수리센터 설치한다

- 농협,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첨단 전자·전기 설비를 갖춘 **대형수리센터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 은행사업용 농기계와 지역 내 대형농기계의 정비·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수리센터 설치해 운영할 **시범 농협 7곳 확정…3년간 170억 원 지원**. 500㎡ 이상의 옥내 작업장과 크레인 또는 2t 이상의 호이스트, 리프트, 부동액 회수기 등 수리장비 구축, 특히 3명 이상의 농기계 정비자격 소지자와 1명 이상의 보조자의 의무적으로 채용, 자동차 부분정비업소로 반드시 등록해 지역 내 자동차 경정비 업무도 병행. 수리센터의 경영효율성 확보 위해 **수리비는 농협이 정한 농기계 표준수리비의 ±10% 이내 정수** 의무화. 고장난 농기계를 편리하게 고칠 수 있도록 **'15년 이후 농촌형 시·군별 1~2개소의 대형수리센터 설치 목표**

※ 경기 화성 남양농협, 전북 김제 동김제농협, 고창 선운산농협, 전남 강진 강진농협, 도암농협 등 5곳…'13년 50억 원, '14년 30, '15년 20 등 총 100억 원 지원 / 충남 보령 대천농협, 경북 의성 다인농협 등 2곳은 기존 중소형을 대형으로 전환…연차별로 40억 원, 20, 10 등 총 70억 원 지원

자료 : 농민신문(2013.6.14)

□ 농업, 100억 긴급 투입…엔저 농산물 피해지원

- 농협중앙회, **지속적인 엔저**에 따른 **농산물 피해지원을 위해 무이자 자금* 100억 원 긴급 투입**. 최근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한 엔저로 한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하락한 상황에서 대일 수출농협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데 따른 것. 지난해 2억8,000만 달러의 수출실적 중 1억7,000만 달러(61%)를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신선농산물의 일본시장 확대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이번 엔저로 인한 피해 커. 더욱이 최근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면서 수출물량이 급감해 **수출농협 및 농가에 대한 지원 절실**. 아베노믹스(Abenomics)에 의해 촉발된 엔저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화훼의 수출감소와 가격하락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되는 만큼 다소나마 **수출농협의 경쟁력 강화·대일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이번 무이자자금은 수출농가 규모 및 현황을 감안 7월, 10월로 나눠 수출농협을 통해 선금급이나 매취자금으로 활용될 예정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6.13)

□ 기재부, 국유농지 매각조건 완화

-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 국유농지 매각조건 완화 내용 등을 담은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읍·면에 위치한 농지(지역 요건)를 임대받아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람에게 1만㎡(면적 요건) 한도로 매각할 수 있는 **국유농지 매각조건 가운데 지역 및 면적 요건 모두 삭제**. 다만 **농지가 경작용이어야 하며, 5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는 조건 유지해 투기목적의 수요를 방지**한다는 방침

자료 : 농민신문(2013.6.12)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2013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2013.6.5)

□ 일본 정부, “벽지 의료보건사업” · 농업 우생권…열악한 농촌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

[일본 농촌 의료 여건]

- **일본 농촌 의료환경**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매우 열악**한 실정
 - 초고령화 사회·저출산, 의사의 대도시 편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농촌에 의사 부족, 산부인과·소아과가 문을 닫는 등 농촌 의료 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의사 수는 선진국(인구 10만 명 당 300명)의 2/3 수준**, 특히 중·소도시의 중·소형병원과 지방병원에서 의사 부족 현상은 훨씬 심각
 - '04년 의대졸업생이 **병원 연수 대상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의사 연수제도가 개혁되면서 심화**
 - 지방 의대생 대부분 대도시 출신자로 대학 졸업 후 해당 지역이 아닌 **대도시에서의 근무 선호**

[일본 정부의 개선 대책]

- 1956년부터 **벽지 및 섬지역의 보건의료사업 계획 수립**, 도도부현에 벽지의 보건의료대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 필요 예산도 지원
 - ※ 현재 11차(2011~2015년) ‘벽지지역 보건의료사업’ 시행
 - 각 **도도부현 벽지에 의료지원기구 설치**해 정부보조사업 지원, 행정기관과 벽지에 근무하는 의사, 벽지 의료 협력시설 및 기관, 벽지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는 의료체제 구축**
 -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등 **중앙정부의 업무 지원**, 각 지역병원이나 진료소에 대한 다양한 **보조사업 지원**도 병행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농촌에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 쿼터(할당)제*** 도입
 - ※ 통상 지자체 외대생은 9년간 지역에 의무 종사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11개 도도부현에서 운영 중
 - 농촌지역 ‘의료지킴이’ 역할...조합원·지역주민 건강 챙겨
 - 그 외 도도부현은 ‘10.4월 말 기준 벽지 의료거점병원 272곳과 벽지 진료소 1,007곳에 운영비 등 지원, 정보통신 기술과 닥터헬리콥터, 순회진료, 간호직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사업도 보조
- **일본 전국농협중앙회(JA전중)도 의료사업 활발히 전개**
 - **JA 전국후생연합회(후생련) 설립**, 도도부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사업 추진 중
 - ※ 전중은 1947년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향상과 농촌의 보건·의료·고령자 복지사업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
- **JA아키타현 후생련** 역시 현내에 9개 병원과 4개 진료소 보유, 암 의료 진료사업 전개 등 **열악한 농촌의료환경 개선에 기여**
-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농어촌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자료 : 농민신문(2013.6.12)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5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 본 자료는 2013년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5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5.0억\$ 달성: 전년 동월대비 8.6%증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13.5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5.0억 불, 전년 동월대비 8.6% ↑**
 - 부류별로는 **신선농식품 108.1백만 불, 가공식품 393.4백만 불**, 각각 전년 동월대비 각각 **19.8% ↑, 5.9% ↑**

<2013년 5월 부류별 농림수산물수출 실적>

단위: 백만 불, %

구 분	당월실적(5월)			누계실적(1~5월)		
	‘12년	‘13년	증감률	‘12년	‘13년	증감률
신 선	90.1	108.1	19.8	427.9	454.1	6.1
가 공	371.5	393.4	5.9	1,802.4	1,849.6	2.6
합 계	461.6	501.5	8.6	2,230.3	2,303.7	3.3

○ [‘13.5월 농식품 수출 증가 원인]

- 대형 수출국인 일본,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주춤한 반면, 홍콩·태국·베트남을 비롯한 ASEAN 국가로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기인
- 껌(41.9%), 커피조제품(40.2%)·토마토(43.4%)·딸기(304.3%)·음료(10.8%)·라면(8.7%)·버섯류(6.8%) 등이 수출증가세 주도

□ 부류별

- **[‘13.5월 신선농산물]** 팥이버섯(21.3%)·토마토(43.4%)·딸기(304.3%) 등은 증가한 반면, 김치(△11.7%)·파프리카(△23.4%)·인삼(△18.1%) 등은 감소
- **(팥이버섯)** 홍보·판촉행사의 노력으로 동남아 및 네덜란드에서 수출 증가, 미국에서도 중국산 버섯과의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며 상승세
- **(토마토)** 신선토마토에 대한 일본의 외식업체(업무용) 수요가 증가, 중국으로의 토마토캐첩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43.4% 증가
- **(딸기)** 홍콩시장에서의 한국산 선호현상, 태국·러시아 등에서의 판촉행사와 항공 수출이 뒷받침되면서 지속적 수출 증가 전망

- **(파프리카)** 조생종 출하 증가에 따른 품질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하락하여 물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출금액은 하락
- **[13.5월 가공식품]** 커피조제품(40.2%)·라면(8.7%)·비스킷(12.1%)·조제분유(60.3%) 등이 증가한 반면, 제3맥주(△25.4%)·소주(△13.0%)·막걸리(△59.2%)·마요네즈(△30.6%) 등은 감소
- **(커피조제품)**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등에서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 **(라면)** 중국에서 수입 라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현지화 전략 성공으로 수출 증가, 홍콩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 **(비스킷)** 중국, 미국, 홍콩 등에서 지속적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중화권에서 한국 과자류에 대한 관심 증대와 반일 정서에 따른 일본 고급 과자류의 대체 효과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
- **(조제분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꾸준한 수요증가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등에서도 수입산 선호현상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 증가
- **(소주, 제3맥주, 막걸리)**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알콜 시장 축소화 및 저가의 무알콜 음료 시장 경쟁 심화로 수출의 감소세 지속

□ 국가별

- **[13.5월 국가별 농식품 수출]** 홍콩(40.4%)·ASEAN(37.4%)·중국(15.1%)·미국(11.8%)은 증가한 반면, EU(△25.4%)·대만(△14.2%)·일본(△9.3%), 러시아(△6.6%) 등은 감소
- **(홍콩)** 부활절, 청명절 특수 효과가 5월까지 이어지며 소비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수출 증가, 웰빙의식이 높아져 고가의 인삼제품, 유제품, 계란 등의 수출도 증가 추세
 - ※ 맥주(3.2백만\$, 6.4%), 홍삼(3.2, 260.2), 라면(1.1, 23.6), 비스킷(1.1, 174.0), 계란(113천\$, 58.8%)
- **(ASEAN)** 한류붐에 힘입어 한국 식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을 위주로 한국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 커피조제품(9.7백만 불, 83.9%), 혼합조제식료품(7.2, 5.6), 껌(6.4, △17.1), 음료(2.6, 18.8), 라면(2.2, △5.2)

- **(중국)** 자국산 조제분유, 자당 등에 대한 불신으로 고가의 수입산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최근 직장 여성의 증가로 분유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
 - ※ 자당(11.9백만 불, △14.3%), 조제분유(6.0, 79.8), 커피조제품(4.7, 29.6), 음료(4.6, 25.7), 비스킷(3.2, 83.3), 라면(3.1, 65.7)
- **(일본)** 화훼·채소류는 엔저현상으로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악화, 주류·면류 등 가공식품은 소비 침체(변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 화훼류(3.0백만 불, △32.9%), 주류(21.8, △25.9), 채소류(15.4, △20.8), 면류(3.6, △28.2), 음료(1.9, △48.9), 인삼류(1.6, △18.6), 김치(5.5, △20.5)
- **(EU)** 경기 불황 지속화 및 건강식품 지향성으로 인한 주력 수출품목인 혼합조제식료품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출 감소
 - ※ 혼합조제식료품(8.8백만 불, △48.0%), 라면(1.4, 25.6), 음료류(1.3, △20.8)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